

1. 헌법 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②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 ③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30일간 공고할 수 있다.
- ④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 ⑤ 국민투표를 거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즉시 공포함으로써 확정된다.

2. 신체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의 수사서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사서류의 등사를 거부한 검사의 행위는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 ② 인천국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이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 ③ 경찰서장이 최루액을 물에 혼합한 용액을 살수차를 이용하여 살수한 행위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 ④ 전자우편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의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⑤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3. 국회 및 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회의원 제명은 헌법상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제명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 ② 국회의원이 공개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언할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법제사법위원회 개의 당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에게 사전에 배포한 행위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
- ③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은 국회에 있으며, 조약의 체결·비준 동의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은 국회의원에게 있다.
- ④ 국회의원의 청렴의무, 지위남용금지의무, 품위유지의무, 겸직금지의무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 ⑤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국회의원의 개별적인 의사에 따라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일반적인 물건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비하여 동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는 사회적 연관성과 사회적 기능이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제한하는 경우 입법재량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함이 타당하다.
- ②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은 국가의 재정상황, 국민 전체의 소득 및 생활수준 기타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인 여건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재량이 인정되기 때문에 법정요건을 갖춘 후 발생하는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은 경제적·재산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의 권리로서 헌법 제23조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에 포함된다.
- ③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연금 형성에 기여가 없는 이혼배우자에 대해서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④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장기간의 모범적인 택시운전에 대한 보상의 차원에서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하였거나, 고액의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한 사람들이므로 개인택시면허는 자신의 노력으로 혹은 금전적 대가를 치르고 얻은 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사법상의 권리’이고, 이때 재산권 보장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적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가 있는 구체적 권리’를 의미한다.

5.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관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할 수 있고, 판사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 ②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각각 70세이며,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 ③ 법원의 예산은 법원행정처가 아닌 정부가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다.
- ④ 법관의 정년을 연장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 ⑤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6.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주민소환은 대표자에 대한 신임을 묻는 것으로서 그 속성은 재선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선거와 마찬가지로 그 사유를 묻지 않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 주민으로서의 자치권 또는 주민권은 헌법에 의하여 직접 보장된 개인의 주관적 공권이 아니어서, 그 침해만을 이유로 하여 국가사무인 고속철도의 역의 명칭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헌법 제117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법령’에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는 행정규칙이 포함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분합에 관한 사항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⑤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주민·자치권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로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를 말하며,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구역의 범위에 육지는 포함되나 공유수면은 포함되지 않는다.

7.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는 것은 법치국가원리에 위배된다.
- ㄴ. 선박소유자가 고용한 선장이 선박소유자의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면 그 선박소유자에게도 동일한 벌금형을 과하도록 한 것은 책임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 ㄷ.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시혜적인 소급입법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입법자가 반드시 시혜적인 소급입법을 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 ㄹ. 종전의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유형을 개정하면서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계승한 자’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범위에 포함시켜 그 재산을 국가귀속의 대상으로 하면 헌법에 위배된다.
- ㅁ.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시 구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 입법은 신뢰보호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 ① ㄱ, ㄹ
- ② ㄴ, ㄹ
- ③ ㄴ, ㅁ
- ④ ㄷ, ㄹ
- ⑤ ㄷ, ㅁ

8. 한국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1948년 제헌헌법에서는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헌법에 규정하지 않았다.
- ②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에서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거로 선출하도록 규정하였다.
- ③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는 최초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명시하였다.
- ④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에서는 적정임금 보장에 대해 규정하였다.
- ⑤ 1987년 제9차 개정헌법에서는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모두 규정하였다.

9. 헌법상 민주주의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정당의 등록요건으로 5 이상의 시·도당과 각 시·도당 1,000명 이상의 당원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②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 사유로 예비후보자가 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하고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 ③ 정당의 자유는 국민이 개인적으로 갖는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단체로서의 정당이 갖는 기본권이기도 하다.
- ④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
- ⑤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구역표의 일부에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구구역표 전체를 위헌이라고 할 수 있다.

10.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대통령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와 달리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를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광역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②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후기학교로 정하여 신입생을 일반고와 동시에 선발하도록 한 것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법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 ③ 치과전문의 자격 인정 요건으로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치과의사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하지 아니한 것은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레지던트 등 소정의 치과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한다.
- ④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그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치과전문의의 의사전문의와 한의사전문의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⑤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1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에 해당하는 손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다른 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나이가 많은 손자녀를 우선하도록 한 것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적은 손자녀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1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불구속 피의자와 피고인 모두에게 포괄적으로 인정된다.
- ②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행정절차에서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주는 보장되지 않는다.
- ③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어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없다.
- ④ 가사소송에서는 헌법 제12조제4항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
- ⑤ 피의자가 가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뿐 아니라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12.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② 누구든지 각급 법원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③ 야간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이미 보편화된 야간의 일상적인 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 ④ 야간옥외집회가 공공질서나 타인의 법익을 해칠 위험성이 있다고 하나, 모든 야간옥외집회가 항상 타인의 법익을 침해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야간옥외집회의 법익침해가능성을 내세워 모든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할 수는 없다.
- ⑤ 옥외집회나 시위가 사전신고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 신고제도의 목적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질서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및 회복을 위해 해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13. 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기 위해서는 법관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연다.
-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직무에 흠결이 있으면 징계에 의해 파면될 수 있다.
- ④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려면 6인 이상의 재판관이 찬성하여야 한다.
- ⑤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14.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은 법률이 아닌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한정하여 인정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의회의원과 그 지방의회의 대표자인 지방의회의장 간의 권한쟁의심판은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서 규정하는 현행 권한쟁의심판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 ③ 교육·학예에 관한 집행기관인 교육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내부적 분쟁과 관련된 심판청구는 권한쟁의심판에 속한다.
- ④ 권한쟁의심판에 있어 ‘제3자 소송담당’을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현행법 체계 하에서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의 권한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의 피청구인의 ‘처분’에는 개별적 행위뿐만 아니라 규범을 제정하는 행위가 포함되며, 입법영역에서는 법률의 제정행위 및 법률 자체를, 행정영역에서는 법규명령 및 모든 개별적인 행정적 행위를 포함한다.

15. 국회의원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총 300명이고, 지역구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4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서 선출할 국회의원의 정수는 1인이다.
- ②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 대하여 비례대표 국회의원의석이 배분된다.
- ③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 ④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가운데 연동배분의석수는 “[(국회의원정수 ×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 - 해당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수] ÷ 2”의 계산식에 따른 값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16.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자로부터 빌려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충족시킨 경우 그 건설업 등록을 필요적으로 말소하도록 한 법률규정은 건설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②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③ 청원경찰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한 「청원경찰법」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④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로 하여금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⑤ 변호인선임서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도록 한 법률규정은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17. 생명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태아는 생명의 유지를 모(母)에게 의존하는 형성 중의 생명이라는 점에서 국가가 헌법 제10조제2문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 ② 국가가 생명을 보호하는 입법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 인간생명의 발달단계에 따라 그 보호정도나 보호수단을 달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 ③ 헌법재판소는 임신 제1삼분기(임신 14주 무렵까지)에는 사유를 불문하고 낙태가 허용되어야 하므로 자기낙태죄 규정에 대하여 단순위헌 결정을 하였다.
- ④ 연명치료의 거부 또는 중단 결정은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으로 보장되므로,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국가의 입법 의무가 존재한다.
- ⑤ 상관을 살해한 경우 사형만을 유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한 「군형법」은 군대 내 명령·지휘체계를 유지하고 유사시 군의 전투력을 확보할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18. 국회의 의사(議事)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의원들의 국정감사활동에 대하여 시민연대가 평가하여 그 결과를 언론에 발표하게 되면 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거나, 국정감사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등의 사유는 방청을 불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국정감사 방청불허행위는 국회방청권을 침해한다.
- ② 오늘날 국회기능의 중점이 본회의에서 위원회로 이동하여 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법안 등의 의안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가 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국회 의사공개의 원칙은 위원회의 회의에도 적용되며, 소위원회의 회의에도 당연히 적용된다.
- ③ 「국회법」은 소수파에 의한 의사방해를 배제하기 위하여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고 하는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 ④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무제한토론의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않고 회의를 계속하며, 회의 중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같다.
- ⑤ 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안전조정위원회를 거친 안건은 제외한다)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전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9.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헌법은 국군의 조직과 편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② 헌법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요건 중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판단 주체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 ③ 대통령은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로 국가의 안전보장 유지를 위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할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할 수 있다.
- ④ 헌법은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규정하고 있다.
- ⑤ 대통령이 감사위원을 임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0.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②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 당사자는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 ③ 공포되었으나 시행되지 않고 이미 폐지된 법률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④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 ⑤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신청 당사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21.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②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균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거나 또는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 ③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영장 발부 과정에서 채취대상자가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거나 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등의 절차를 두지 아니한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 ④ 교원 징계처분에 관하여 재심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⑤ 심의위원회의 배상금 등 지급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규정은 신청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2. 다음 계산식에서 도출되는 값으로 옳은 것은?

$A + (B \times C) - D + E - F = ?$

<보 기>

- 국회의장은 임시회의 집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기일 (A)일 전에 공고한다. 다만, 국회의장은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발생한 경우나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 경우에는 집회기일 (B)일 전에 공고할 수 있다.
- 예산안이 아닌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C)명 이상의 찬성 의원과 연서하여 미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었을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D)시간 이후 (E)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F)명으로 한다.

- ① 7
- ② 21
- ③ 27
- ④ 31
- ⑤ 51

23.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 ④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고, 그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이다.

24.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조사실에서 수용자가 조사를 받는 동안 계구를 사용하는 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검찰수사관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참여신청서의 작성을 요구한 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 ③ 피청구인인 경찰서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범죄혐의자들의 요양급여내역의 제공을 요청한 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 ④ 경찰관이 기자들의 취재 요청에 응하여 구속된 피의자가 경찰서 조사실에서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 ⑤ 경찰서장이 옥외집회신고서를 반려한 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25. 「국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서로 다른 정당에 속한 국회의원들은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한다.
- ③ 의장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표결에도 참가할 수 있다.
- ④ 법제사법위원회의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 기간은 90일이다.
- ⑤ 예산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지 않는다.